



프랑스 소요
2~4면

정부의 강경 우익화와
노동자 저항
16, 15, 6, 11, 12, 13면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
6면

그리스 신나치
의회 진출
10~11면

통제 불능 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14면



미국 대법원의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 공격
8~9면

프랑스 대중이 길을 보여 주다

관련 기사 2~4면



새로운 반란의 불꽃이 타오른 프랑스

찰리 김버

리옹은 전쟁터가 됐다. 인구 150만 명이 넘는 프랑스 제3의 도시 리옹에서 밤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경멸과 체계적 차별에 시달려 온 사람들이 반란에 나선 것이다.

지난주 알제리계 10대 청소년 나헬이 경찰에게 처형당한 사건을 계기로, 오랜 세월 체제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는 정당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반격에 나섰다.

리옹의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 엘렌은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경찰은 거대한 분노에 밀려 여러 번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 분노는 당국을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사회 꼭대기 층이 이렇게 겁에 질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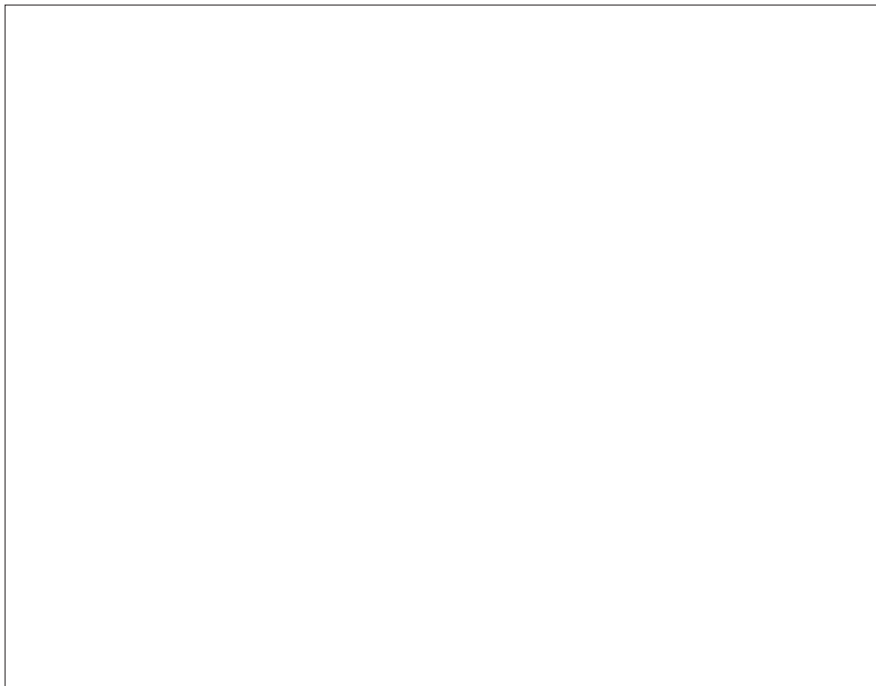
“가난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서가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고 미국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에마뉼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곤경에 처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통치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고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소요가 지금 수준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에 대한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찰과 정예 부대가 투입돼



방화와 약탈은 프랑스 사회의 깊은 계급 분열과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를 보여준다

며칠 후 도심의 시위를 대부분 진압했다. 그러나 빈곤층과 북아프리카계가 많이 거주하는 교외 지역인 베니시외와 기보르에서는 시위가 계속 격렬하게 이어졌다.

경찰에 의한 살인이 급증한 것은 2017년 당시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사회당 소속)가 ‘정당방위’를 위한 경찰의 총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도록 법을 개정하면서부터였다. 법 개정 이후 ‘지시 불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했고, 지난해 그 수는 최소 13명에 달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난 소요의 규모는 정부의 연금 개악에 맞서 수개월간 이어진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프랑스

사회에 불쏘시개를 잔뜩 남겨 놓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은 민주주의와 경찰 폭력,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원하느냐 등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했다. 이번 소요 또한 체제에 관한 중대한 물음들을 제기했다.

두 저항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직접 도출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 그래서 둘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연결을 위해 사회주의자들과 투쟁적인 노동자들은 분투해야 한다. 소요 참가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조직된 노동계급의 힘과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다.

전쟁을 준비하는 경찰 ‘노조’

프랑스 경찰의 절반을 대표하는 ‘노조’들은 지난주 자신들이 ‘기생충들’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연맹과 전국자율노조연맹(UNSA) 조직들은 성명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오늘 경찰은 교전 중이다.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파시스트와 극우의 수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 야만적 무리에게는 진정을 촉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강제로 진정시켜야 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지금은 노동쟁의가 아니라 이 기생충들에 맞설 때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더 많은 면책과 자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내일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마크롱이 그들의 요구를 상당히 들어줄 것은 뻔하다.

경찰들은 나헬을 살해한 경찰관이 구금된 것에 불평했고, 가장 파시스트적인 경찰 ‘노조’인 프랑스경찰노조는 나헬을 쏜 것을 환영하는 트윗을 올렸다가 구설수에 오르자 이를 삭제했다.

경찰의 살인과 거짓말

이번 소요는 경찰이 17세 소년 나헬을 총으로 쏜 뒤 거짓말을 한 것을 계기로 분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파리 외곽의 낭테르에서 나헬을 총으로 쏘았다. 경찰은 나헬이 차를 세우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위터에 게시된 동영상 보면, 경찰은 교통 체증으로 멈춰선 나헬의 차량 옆에 서 있었다.

한 경찰관이 운전석에 있는 나헬에게 총을 겨눴고 나헬이 차를 몰고 가 버리려 하자 그 경찰관은 나헬의 심장을 쏘았다. 그 영상을 보면 이 살인자가 발표하기 전 한 경찰관이 “네 머리에 총알을 박아 넣겠다”고 위협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다른 경찰관이 “짜 버려”라고 말한다.

또 다른 영상에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경찰관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 3면으로 이어짐

청년들의 약탈은 정당한 분노

소요 참가자들의 주요 표적은 경찰서와 국가 상징물이었다. 일부 지역

프랑스 소요는 조직 노동계급의 투쟁과 결합될 수 있다

드니 고다르 프랑스 혁명적 사회주의자

현재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일은 프랑스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혁명적 기회의 시대인 것이다. 이 혁명적 기회는 재난을 타개할 해법을 제시한다. 다수에게 내리는 재앙을 소수인 자본가 계급에게 내리는 재앙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며칠 동안 프랑스가 밤낮으로 불타고 있다. 경찰서와 도서관, 학교, 그 밖의 많은 관공서가 불길에 휩싸여 있다. 필자의 파트너는 교사인데 그녀도 학교가 불타고 있다고 기뻐했다. 이 기관들은 노동계급 지구에 들어서 있지만 차별을 양산하는 기관들이다. 대중교통 수단들마저 불타고 있다. 버스가 불타고 전동차도 불타고 그 밖의 많은 것들이 불타고 있다.

현재 프랑스 상황은 미국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일어났을 때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번 소요는 거대한 사회적 반란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번 소요는 노동계급이 연금 문제를 놓고 사용자들과 지배계급에 맞서 닥 달 동안 싸운 뒤에 일어났다.

강조하건대 이 투쟁들을 그저 서로 손발을 맞추지 않은 채 연이어 벌어지는 별개의 투쟁들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닥 달 동안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불과 몇 주 만에 경찰과 국가,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이 폭발했다. 자본주의와 지배계급, 국가의 강제력과 구조에 맞선 전(全)계급적 대결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연금만 공격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의 권리를 공

프랑스 소요와 그에 앞선 연금 개악 반대 투쟁 모두 거대한 사회적 위기라는 공통된 배경 속에서 분출했다

격하고, 다른 많은 것들도 공격하려 한다. 마크롱은 일체의 저항을 분쇄하고자 한다. 이것은 도발이다. 우리는 이번 소요를 찬양해야 한다. 그러나 수치스럽게도 대부분의 좌파가 그러고 있지 않다.[다만, 프랑스의 반자본주의 신당(NPA)은 이 소요에 지지를 표했다 —역자] 우리는 흑인과 아랍계가 대다수인 그 노동계급 청년들의 용기와 단호함을 옹호해야 한다.

우리 계급에 속한 이 청년들이 매일 밤 경찰과 싸우고 있다.

우리는 르펜을 조심해야 한다. 르펜이 거느린 파시스트들은 강력하다. 그들은 현재 공세를 펴고 있고 현 상황에서 득을 볼 수 있다. 2주 전 한 여론조사

에서 응답자의 41퍼센트가 다음 대선에서 르펜이 이기길 바란다고 답했다. 닥 달 동안 파업이 이어진 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파시스트들은 시위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파시스트들에 맞선 투쟁을 위한 희망과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그러

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청년들은 준비돼 있다.

매일 밤 경찰 4만 5000명이 장갑차를 대동하고 거리로 나와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 4면으로 이어짐

▶ 2면에서 이어짐

모습이 담겨 있다.

“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애라구요. 재 엄마가 혼자서 재를 키웠어요. 그런 애를 자기 손으로 묻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자 경찰은 그 구급 대원을 체포했다.

6월 27일 밤 분노한 시위대가 쓰레기통을 불태우고 버스 정류장을 부수고 낭테르의 도로를 차단하려 했다.

6월 28일에는 다시 낭테르, 툴루즈, 릴, 루베, 렌, 리옹, 아미앵 등 파리 교외

의 넓은 지역으로 반란이 확산됐다. 몇몇 지역에서는 경찰이 퇴각해야 했다.

경찰은 6월 29일 나헬의 어머니 무니아가 지지한 약 6000명 규모의 추모 시위를 최루탄으로 진압해 울분을 더욱 키웠다. 경찰과 경찰 말을 고분고분 받아쓰는 언론들은 피해자를 혈통으려 했다.

나헬이 무시무시한 전과자라는 얘기도 나왔다. 거짓말이었다.

출처 Charlie Kimber, 'France is aflame with new revolt' (2023. 7. 4) / 번역 박이랑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 3면에서 이어짐

것을 모두가 안다. 마크롱은 연금 개혁 법안을 제정하고 며칠 뒤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 이제 법이 제정됐으니 그 사안은 끝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의 운동은 분쇄되지 않았다.

노동자 운동과 소요 참가자들 사이의 연대를 건설해야

우리는 이 소요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면 100여 년 전 폴란드 출신의 독일 혁명가인 로자 룩셈부르크가 대중 파업에 관해 했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중 파업은 상층에서 계획되고 결정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룩셈부르크는 지적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전혀 점진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개혁주의자들은 점진적 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지금 벌어진 소요에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 청년들이 벌이는 소요는 노동계급에게 어려운 과제를 제기한다. 소요 참가자들은 국가와 국가의 무장력과 정면 대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다고 노동계급이 자동으로 그와 같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과, 경찰·국가에 맞선 투쟁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혁명은 단지 파업이 아니다. 혁명은 파업과 봉기가 일어나는 것이다. 혁명은 도처에서 노동계급이 스스로 조직화하고 그 힘을 이용해 국가를 분쇄하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좋은 말들을 늘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희망을 주려면 우리 모두가 투쟁할 것임을 보여 줘야 한다. 7월 14일은 프랑스의 국경일이다.

그날은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기념하는 날이다. 프랑스 지배자들이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우리는 그날 인종차별 반대 행진을 조직하고 있다. 그날 파리의 한 편에는 마크롱 곁에 프랑스의 삼색기들이 나부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리의 다른 편에서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의 깃발을 치켜들 것이다. 우리 계급에 속한 미등록 이민자들도 여기에 합류할 것이다.(이들 중 많은 수가 현재 올림픽 경기장을 짓고 있다.)

프랑스에 있는 우리 동지들은 파업과 소요에 관여하고 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연대를 표하고 그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주도력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그들에게도 중요하고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우리는 직접 사태를 바꿀 힘이 없지만, 전진을 위한 발판을 건설해야 한다.



경찰과 국가, 인종차별에 맞선 프랑스 소요는 정당하다. 6월 30일 나헬의 죽음에 항의하는 스트라스부르의 시위대

소요 참가자들을 비난하는 프랑스 공산당 대표

찰리 김버

프랑스 좌파의 일부는 이번 소요 사태에서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했다. 프랑스 공산당 지도자 파비앵 루셀은 소요 참가자들에게 역겨운 비난을 잇달아 퍼부었다. 6월 30일 루셀은 “그날 밤 일어난 폭력을 전적으로 규탄한다”고 트위터에 썼다. 경찰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한편, 루셀은 “좌파라면 공공 서비스 약탈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수호를 지지해야 한다”고도 썼다.

정부가 “공공 서비스”(경찰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탄압을 정당화하는데 말이다. 루셀은 “공공의 안녕을 위한 더 강력한 수단”을 촉구했다.

루셀은 다음과 같이 쓰기도 했다. “많은 젊은이들은 집에 머물러 있다. 많은 부모들도 걱정해 휩싸여 자녀들을 집에 머물게 하고 있다. 소수만이 관공서를 공격하고 약탈하는 것이

다.” 루셀은 소요가 벌어지는 동안 소셜미디어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소셜미디어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어느 시점에 나라 전체 분위기가 지나치게 격앙되면 소셜미디어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루셀은 오랫동안 이민자 규제 강화를 촉구한 전력에 있는 자이기도 하다. 사회적 위기가 프랑스를 휩쓰는 지금, 루셀은 저항을 배신하고 있다.

파시스트들의 폭력을 경계해야

2017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흑인이나 아랍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은 길거리에서 경찰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20배 높다고 한다. 마린 르펜의 파시스트 정당이 어느 때보다도 더 세를 키우고 프랑스 정부가 인종차별적 법률을 강화하면서 탄압은 더 심해졌다. 소요가 벌어지는 동안 일부 극우는 경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폭행하려고 거리로 나왔다.

이는 파시스트들이 선거에서 성과를 내면, 거리에서 적들을 공격하는 파시스트 캠페를 양성하려 하는 자들도 힘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거리 극우의 힘은 현재 벌어

지는 소요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노동자 조직들이 발휘할 수 있는 힘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7월 2일 리옹에서는 파시스트 캠페 수십 명이 “파랑, 하양, 빨강, 프랑스는 프랑스인들에게”라고 외치며 행진을 벌였다. 흑인이나 좌파 활동가를 마주치면 당장이라도 두들겨 팼 기세였다.

그러나 그들은 거대한 소요 참가자들의 무리를 맞닥뜨렸다면 알아서 흩어졌을 것이다. 파시스트들은 경찰 내의 가장 악질적인 인자들을 행동에 끌어들이려 한다. 그러나 인종을 불문한 청년

핵 무장국들의 로비 단체 IAEA, 눈가림 보고서 발표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보고서는 핵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순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IAEA는 10년 전부터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해 왔다.

“2013년 IAEA는 제2차 후쿠시마 제1원전 사찰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통제된 해양 방류의 재개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태스크 포스가 짜여지기 전부터 이미 이러한 권고를 내놓았습니다.”(그린피스)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 방침을 발표한 2021년에도 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IAEA 보도 자료, 2021년 4월 13일).

IAEA의 ‘검증’을 믿을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온 이유다.

이번 IAEA 보고서도 안전 검증 보고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대부분 도쿄전력 측이 설정한 일부 잣대만으로 생태계의 복잡한 효과를 평가한 후 “오염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해양생물 3종만 평가한 것이나, 방사성 물질의 체내 농축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는 ‘모르는 것을 안전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형적인 ‘답정너’ 식 보고서이자 “가장 비과학적인 태도”(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다.

둘째, 알프스의 정화 능력에 관한 IAEA의 독자적 평가가 없다. IAEA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깨끗해졌다고’ 판정한 물(처리수)이 IAEA가 정한 기준치에 비춰 봐도 ‘깨끗하다’고 평가했을 뿐이다. 즉, 도쿄전력과 IAEA가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동일하게 측정한다는 뜻이지 안전성 보증이 아니다.

게다가 세 차례 평가하기로 한 시료 분석에서 단지 한 차례의 결과만 포함됐다. 상대적으로 더 오염됐을 시료 2개에 관한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최종’ 보고서를 낸 것이다.(<한겨레>)



한국의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은 일본 내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준택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와 IAEA의 태도를 이렇게 비꼬았다. “어떤 학생들은 실험을 시키면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는 그걸 목표로 적당히 실험 결과를 조작하는 일이다.”

라파엘 그로시

셋째, IAEA는 자신들이 내세워 온 원칙조차 내팽개쳤다. IAEA의 내부 원칙은 ‘방사성 물질 배출의 잠재적 위험성에 비해 이익이 큰 경우에만 배출이 정당화된다’고 돼 있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없으므로”



한통속 라파엘 그로시(좌)와 기시다(우)

애당초 검증 대상에 이익과 위험 산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는 4일 일본기자클럽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해양 방류 이외의 선택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물을 한국·중국·미국·프랑스도 방류하고 있다”며 일본을 두둔했다. 이 논리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핵심 논거다.

이 뻔뻔하고 모순된 태도를 파악하려면 IAEA 보고서가 안전 검증을 책임지거나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내적 모순이 없도록 조연을 썼을 뿐 실제 환경과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또, 일본 정부의 해상 방류 방침을 도우려고 TF가 구성됐다는 점, 최종 책임은(따라서 권한도) 당사국(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 등을 서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언제든 원하면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한 도움을 회원국 정부들에 줄 수 있다는 뉘앙스로 쓰여 있다.

IAEA는 이를 계기로 새로운 관행(핵 폐기물의 대량 해양 투기)을 만들려 하는 듯하다.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핵발전소

사고의 손쉬운 처리 방식을 마련함으로써 핵 사고가 끼칠 다양한 피해에 관한 일부 지배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는 것이다. ‘오염되면 드넓은 바다에 버리면 된다. 핵발전은 앞으로도 값싼 에너지원으로 남을 것이다.’

1951년 민간 기업으로 출범한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사고 뒤 그 처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국유화됐다.

이는 대형 핵발전소 사고가 “100만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할 것이라던 핵 산업계의 신화가 허구임을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물연대 노동자

운송료 인하 막기 위해 전면 파업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철강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화물연대 전남지역 본부 소속)이 운송료(임금) 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7월 3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고, 최근 유가가 떨어지자 화주(기업주)와 운송사들은 운송료 삭감에 득달같이 달려 들고 있다.

포스코와 하청 운송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얼마 전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포스코플로우와 10개 운송사들의 입찰 계약이 완료됐는데, 이후 운송사들은 노동자들에게 7월부터 운송료 5.5퍼센트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운송료 삭감의 배후엔 원청인 포스코가 있다. 포스코가 최저입찰제를 실시해, 운송사들끼리 경쟁을 부추겨 단가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운송사들은 물량 확보에 눈이 멀어 저가 응찰을 하고, 그 책임은 화물 운송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은 운송료가 해마다 낮아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다.

“운송사들은 올해, 작년 대비 94.5퍼센트로 포스코와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낮아진 단가가 기준이 돼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됩니다. 그 다음해에는 더 낮은 가격이 됩니다. 운송사는 그만큼 운송료를 삭감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운송사들이 지난해 유가 폭등으로 일부 올랐던 운송료를 몇 달 전에 회수해 간 뒤라 더욱 분노하고 있다.

김대선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운송사들은 유가가 하락했다며 올해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유가 폭등으로 인상됐던 운송료를 모두 회수해 갔어요. 그런데 이번 입찰 과정에서 또 운송료를 5.5퍼센트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8월 말로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물 노동자 파업으로 멈춰 선 철강 단지

데, 유가가 인상될 경우 운송료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개, 돼지도 아닌데 저들은 자기들이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합니다.”

파업 노동자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철강배후단지 CJ대한통운택배 광양지사 앞에 거점을 마련하고, 물량 봉쇄와 대체 차량 저지 투쟁을 하고 있다.

철강배후단지에는 창고, 재가공 업체 등 제철소를 지원하는 시설들이 집중돼 있다. 파업 노동자들이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등 10개 운송사들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 코일(연속적인 철판 재질을 나선 모양으로 감아놓은 상태의 철강 제품으로 롤 휴지처럼 말려 있다) 제품은 제철소 내에 쌓아 두지 않고, 대부분 생산 직후 바로 이곳으로 옮겨진 뒤 보관, 재가공된 후 사용처로 납품된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제철소에서

철강배후단지로 철강 코일 등의 제품을 운송하는 셔틀 노동자들과, 철강배후단지에서 사용처로 납품 운송하는 노동자들이다.

봉쇄

전면파업으로 철강 제품 운송이 막혔다. 파업 이튿날 기자가 방문했을 때, 철강배후단지는 철강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 차량 하나 발견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철강단지가 멈춘 듯했다.

세찬 장맛비에도 파업 노동자들은 대체 차량 저지와 물량 반출 시도 감시·저지 행동을 벌이고 있었다.

포스코 직영차량 10여 대를 제외한 셔틀 노동자들 대부분(136명)이 파업에 동참해 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이 철강배후단지 내 창고와 재가공 업체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코일 운반 트레일러를 일반 화물차로는 대체할 수 없어, 광양제철소 내 장치물(포화도)은 높아지고 있다.

사용처로 납품 운송하는 노동자들(210여 명)은 자신의 차량으로 소속 운송사 창고문을 봉쇄했다. 사측은 봉쇄 차량을 지게차로 옮겨서라도 물량 반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저지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

늘어나는 가계 빚과 부동산 대출 부실화

강동훈

새마을금고에서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금융 불안정이 심상치 않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2021년 말 1.93퍼센트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퍼센트로 올랐고, 지난달 말에는 6.18퍼센트(연체액 약 12조 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저축은행 연체율(5.07퍼센트)보다도 높다.

수도권의 일부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10~30퍼센트대에 이른다고 한다. 7월 5일에는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을 추진 중인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길게 줄을 서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 3~4월에는 전체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7조 원가량이 빠져 나갔다.

새마을금고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부랴부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7월 10일부터 새마을금고 1294곳 중 부실 위험이 큰 100곳에 대해 특별 검사·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부실이 심각한 곳들은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험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기가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매우 크다. 다른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을 크게 늘렸다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 기업 대출잔액은 2019년 말 27조 2000억 원에서 올해 1월 56조 4000억 원으로, 무려 29조 2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증권사들의 PF 대출 연체율이 최근 15퍼센트대로 급등하는 등 금융권 전반에서 PF 부실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사들도 PF 대출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낮추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기가 이른 시기에 해소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의 미분양 주택 수가 이미 10만 호를 넘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 주택 수는 4월 말 기준 7만 1000호 수준이지만, 건설 기업들이 흔히 미분양 수를 축소해 보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분양을 미루던 건설회사들이 하반기에는 대규모 주택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 미분양 주택 수는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에 부실 채권 해소를 요구하는 한편, 펀드를 조성해 부실 PF 채권을 인수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호전될 기미가 거의 없어서 정부의 지원책이 큰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하반기에 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을 예고한 상태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품 붕괴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위험한 줄타기가 위기를 더욱 키우다

금융 불안정이 점점 커지자, 정부와 금융 당국의 모순도 점점 커지고 있다.

금융 안정을 위해 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압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닥칠 ‘역전세 난’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대출 규제를 풀고 있다. 지난해 초에 고점을 찍은 전세 계약의 만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들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 줘서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2퍼센트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를 더욱 키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을 가계부채 4대 위험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고,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기준금리를 더 높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말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감소하던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이미 4월부터 다시 반등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또 다른 뇌관이다. 올해 1분기 말 국내 자영업자 대출은 1034조 원에 이르고 연체율은 8년 만에 가장 높은 1퍼센트를 기록했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의 대출도 737조 원을 넘겼다. 여기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행된 자영업자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9월에 종료되면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파산하면서 금융권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자, 한국은행이 난처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GDP 대비 80퍼센트 수준으로 분명히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 금융 기관들에게 빨리 부실 채권을 털어낼 것을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부양과 금융권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는 높이지 않다 보니, 오히려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 8면에서 이어짐

책이 미국인들의 기회를 뺏는다고 비난했다. 이런 주장은 불황으로 고통받는 백인 중간계급 하층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

이제, 그전까지 정치 무대 바깥에 있던 극우파들이 지배자들이 조장한 새로운 인종차별을 성장 발판으로 삼았다.

극우는 소수인종들, 특히 흑인과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을 점령하고 있다”는 데마고기와 음모론을 퍼뜨리며, 실업으로 고통받는 백인 하층민들에게 가 닿으려 했다. 그러면서, 약자 우대 조치를 그런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런 극우 운동은 인종차별을 중심으로 결집해 공화당 기층을 잠식하며 세를 불렀다.

이번 위헌 판결 소송을 주도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의 조직자 에드워드 블럼도 그런 운동 소속이다.

블럼은 대학생이 아니라 71세의 극우 인자로, 약자 우대 조치 반대 운동을 30년 넘게 조직해 온 ‘전문 소송꾼’이다. 블럼은 간판이 될 원고를 내세워 소송을 걸고 패소하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원고를 내세워 다시 소송을 걸어 운동에 이용하는 전술을 즐겨 써 왔다.

이런 일련의 공격에 민주당은 전혀 제대로 도전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우파의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말은 했지만, 이는 대중의 평등 염원을 순치시키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었을 뿐이다.

민주당은 인종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체제를 수호하고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 대중에 전가하는 데에 열심이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마찬가지였다. 오바마의 당선은 엄청난 희망을 불러일으켰지만, 오바마는 기존 정책들을 사소하게만 수정한 채 그대로 유지했다. 오바마 정부하에서 경제 위기 등 체제의 위기가 심각해지는 동안 인종차별도 더 심각해졌다.

트럼프

그에 대한 환멸에 힘입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관련 기사 본지 195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 당선에는 오바마 책임도 있다’)

트럼프는 임기 중 우파들의 공격을 더한층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했다.

첫째, 공공연하게 반동적 주장을 펴고 정책을 추진해 공식 정치 지형을 우경화하고, 평등권을 증오하는 극우 운동이 기층에서 성장하게 도왔다.

둘째, 기독교 우파들과 공조해 극우 판사 셋을 연방대법관에 지명했다. 이들은 우파 운동의 공격 대상이 된 평등권 운동의 성취들에 사법 철퇴를 가했다.

지배 엘리트들이 조장한 인종차별과 그에 고무돼 기층에서 성장한 극우 운동이 만나, 잇따른 공격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리고 위험하게도, 이런 반동적 판결에 의해 가장 크게 고무될 것도 그런 극우파들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 일부 면제도 위험?

연방대법원은 바이든이 내놓은 대학 학자금 상환 지원 계획도 위험이라고 판결했다.

미국은 학자금 부담이 극심하기로 악명 높다. 미국 학자금 대출 총액은 1조 7800억 달러(약 2300조 원, 2023년 3월 현재)에 이른다.

사정이 이런지라 학자금 대출 전액 탕감은 2011년 ‘점거하라’ 운동 이래 미국 청년들의 가장 주요한 요구였다.

지난해 바이든이 내놓은 계획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 중 아주 적은 일부만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지원 액수가 부족해 부채 부담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바이든 정부 자신

이 자인한 수준이었다.

연방대법원이 여기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궤죄죄한 서민 지원조차 “사회주의적”이라며 질색하는 우파 반발의 일부였다.

물론 대선 선거운동 돌입을 앞두고 바이든의 인기용 정책에 흠집을 내고 바이든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어, 공화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효과도 노렸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판결은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나 약자 우대 조치 공격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개혁 염원이 조금치라도 반영된 정책은 모조리 공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입 공정 경쟁에 위배?

약자 우대 조치를 공격하는 논리 중 하나는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능력 없는 흑인들을 대학에 입학시키느라 능력 있는 백인·아시아인의 명문대 입학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명문대 졸업생이 극도로 불공정한 기여입학제(동문·기부자 자녀 우선선발 제도)로 가장 많이(29퍼센트) 배출된다는 사실은 무시한다.

약자 우대 조치가 시행된 이후 흑인의 대학 합격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흑인 합격률이 높아질 때 백인이나 아시아인의 입학률이 낮아진 적은 없다. 또, 흑인의 대학 합격률은 늘 그 두 집단보다 낮았다.(그래프2)

그리스 신나치의 의회 진출

개혁주의 정당 시리자의 실패가 낳은 결과

이사벨 링로즈가 그리스 총선에서 의석을 획득한 극우 정당들에 대해 살펴 본다.

파시스트들이 대거 그리스 의회로 돌아왔다. 6월 총선에서 파시스트 정당 세 곳이 도합해 거의 13퍼센트를 득표했다.

스파르타당, 그리스해법당, '니키(승리)'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300석 중 34석을 차지했다. 스파르타당이 4.7퍼센트를 득표하며 세 정당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그리스 반파시스트 조직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에서 활동하는 페트로스 콘스탄티누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파시스트] 황금새벽당의 새로운 2중대입니다.

"그 지도부는 구 [황금새벽당] 지도부 출신의 신나치입니다. 스파르타당은 황금새벽당 지도부가 또다른 이름으로 활동하기 위해 존재하는 당입니다."

황금새벽당이 범죄 조직으로 지정된 후 극우는 분열했다. 지금은 서로 다른 정당들이 비어 있는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황금새벽당은 의회에 입성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석을 유지했다.

2020년, 5년 반 동안의 재판 끝에 황금새벽당 지도부와 당원 68명이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이 있기 전까지 노동조합원, 반(反)파시스트 활동가, 이민자들에 대한 살인·공격이 횡행했다.

지금은 금지된 파시스트 황금새벽당의 지도자이고 현재 수감 중인 일리아 카시디아리스는 신생 엘리네스[그리스인들]당으로 재기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정계 복귀 시도는 5월 1차 총선 전 대법원이 가로막았다. 그래서 카시디아리스는 스파르타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호소했고 6월 2차 총선에서 스파르타당이 선전하게 됐다.

스파르타당의 지도자인 바실리스 스티가스는 [선거 후] 자신의 첫 공식성명에서 카시디아리스가 승리를 위한 "연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 아낌없는 감사를 표했다. 12명의 스파르타당 의원 중 6명이 카시디아리스의 엘리네스당에 있었다. 스파르타당은 황금새벽당처럼 인종차별적이고 이주민을 혐오하

지만, 거리 폭력은 아직 황금새벽당과 같은 수준은 아니다.

그리스해법당과 니키당은 그리스 정교회가 지지하는 종교적·전통주의적·민족주의적·음모론적 정책들을 결합하고 있다. 5월 1차 총선에서 니키당은 의석을 얻지 못했고, 그리스해법당은 2019년의 10석보다 늘어난 16석을 차지했다.

그리스정교회

그리스해법당의 지도자 키리아코스 벨로풀로스는 전에 민중정교회 경보당에 있었는데, 이 당은 2007년에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했다. 2011년 이 당은 신민당, 그리스 사회당과 연합해 경제 위기 시기 과도 내각의 일원이 됐다. 그 결과로 이당은 붕괴했고 이로 인해 황금새벽당이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벨로풀로스는 2016년 그리스해법당을 결성한 후 그리스 텔레비전에 출연해 '코로나19 특효 크림'을 팔았다. 그는 예수의 친필 편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니키당은 2019년 2월 시리자 정부가 북마케도니아와 협정을 맺어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을 승인한 후 창립됐다. [그리스 우익들은 나라명에서 '마케도니아'를 빼라고 요구한다.] 니키당은 팬데믹 동안 교회의 지원을 받으며 록다운과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게다가 니키당은 공공연한 동성애 혐오 정당이다.

또한 그리스해법당과 니키당 모두 격렬하게 이민을 반대한다. 그러나 반(反)이민을 그들의 주요 관심사로 만든 것은 스파르타당이다.

페트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들 두 신당은 패닉에 빠진 지배계급의 산물입니다. 지배계급은 악독한 인종차별적 방식을 이용해 좌파를 겨냥합니다. [6월 14일 750명이 탄 난민선 침몰로 사망한] 600명의 난민과 이주민을 살해하는 정책을 편 것도 다름아닌 신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리고 시리자는 집권했을 때도, 특히 야당으로서도 이에 도전하지 못했다. 시리자는 난민 환영 정책을 버리고 튀르키예와 접한 국경의 "국경 장벽"을 지지하고 유럽연합의 국경 봉쇄와 난민 센터 폐쇄를 수용했다.



황금새벽당 해산 후 그 후신들이 다시 정치적 터전을 꾸리고 있다. 2015년 아테네에서 행진하는 황금새벽당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상황은 더 위험해질 것이다”

페트로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새로운 파시스트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8년부터 [황금새벽당에 대한 범죄 조직 수사가 본격화 한] 2013년까지 시기에 황금새벽당이 이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살인을 늘리던 때를 상기하고 지금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의 폭력 수준은 그 시기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페트로스는 이것이 그리스 정치의 위기가자 파시스트들이 더욱 성장하는 비옥한 토

정치 파업이 뭐가 문제인데?

정치와 경제의 분리 — 노동계급 잠재력 제약하기

임준형

민주노총이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7월 3일부터 파업과 집회를 하고 있다. 이번 투쟁은 15일까지 이어진다.

정부·여당, 사용자 단체들, 친기업 언론들이 일제히 민주노총 파업을 비난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권 퇴진, 핵 오염수 투기 중단 등 노동조건 문제와 무관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민주노총의 진보연합당 주진을 겨냥해 이번 파업을 ‘내년 제도권 정당 진입을 위한 고교보화보하기’라고도 비난한다.

“불법 파업” 비난은 주로 현행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쟁의만을 합법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조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런 정권 퇴진 요구는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핵 오염수 방류나 평화 문제를 보자면, 핵 오염수는 노동계급과 대중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군사 긴장이 고조돼 실제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주로 노동계급 등 서민들이 희생되고 노동조건도 크게 악화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비난하는 (정치적 및 경제적)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정치적·시민적 권리로 노동자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7월 3일 민주노총 파업 대회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다 사용한다. 수많은 연줄로 연결된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을 활용하고, 투자 중단, 자본 도파 등 경제력을 이용해 선출된 개혁 정부에 압박을 가한다.

그런 지배자들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이 정치·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이유는 그 힘이 두렵기 때문이다.

두려움

지난해 6월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이자 정부와 사용자들은 일주일 만에 일부 산업의 “셧다운 위기”를 걱정해야 했다. 게다가 그 파업은 물가 폭등에 대한 서민 대중의 불만을 대변했고, 취임 초 윤석열의 위신을 깎아 내리는 데 큰 구실을 했다.

화물연대가 연말에 재파업에 나섰을 때 효과적인 연대가 건설됐다면 윤석열의 위기를 훨씬 심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1983년 영국 노동조합들은 항만으로 핵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영국 정부의 핵폐기물 해양 투기 정책을 철회시킨 바 있다. 이는 국제조약 기구인 런던해양투기협약이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

사실 차티스트 운동이 보여주듯이 정치적·시민적 권리 자체가 노동자들이 파업 등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한국에서 1987년 7~8월 노동자 대파업은 정치 파업은 아니었지만 군부가 6월 항쟁의 정치적 성과를 되돌릴 엄두를 못 내게 하는 효과를 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힘을 정치·사회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것은 실정법과 무관하게 정당하다. 바람직하기로는, 요구 면에서뿐 아니라 투쟁 수단이 명실상부하게 정치적이 되는 것(즉, 계급 전체의 투쟁)이다. 민주노총의 파업을 모든 노동자들이 지지하며 더 확대되도록 애써야 하는 이유다.

정치 파업을 금지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도 정치 파업을 금지한다.

자본주의 생산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데 달려 있다. 덕분에 노동자들에게는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새 사회를 건설할 잠재력이 있다.

지배자들이 노동자들의 자체 결사를 불가피하게 인정하고 허용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하에서,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이 단지 즉각적이고 협소한 이익을 보장하는 데 그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배자들은 노동조합이 해당 부문(산업 또는 업종 또는 기업 또는 특정 고용형태)에서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둘러싼 경제투쟁만 하고, 전체 노동자들과 관련된 정치·사회적 문제는 정당이 의회를 통해서(또는 공직자들이 국가기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부추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정치 파업 금지도 그 일환이다.

착취

코로나 방역 해제하니 토사구팽?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확충·임금인상 파업을 예고하다

신정환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 확충, 임금 인상,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7월 13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7월 파업의 주요 부대가 될 듯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병원 노동자들은 헌신적으로 일하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정부가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지 않은 탓에 노동자들은 만성적 인력 부족 속에서 자신을 희생해 가며 환자들을 돌봤다.

동시에 병원 노동자들은 정부에 항의하며 투쟁도 벌였다. 이들을 지지하는 여론도 컸다.

그 속에서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9월 2일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대 등의 약속을 받아 냈다. 산별교섭 타결 후에도 한양대의료원지부와 고려대의료원지부 등은 파업을 벌여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의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그 뒤 2년 가까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2021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모두가 나서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 대 5 등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석열 정부는 약속 이행을 위한 지원은커녕 재정 긴축과 복지 삭감을 추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번아웃으로 내모는 게 윤석열 식 “코로나 영웅” 대접? 6월 8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결의대회

진하고 있다.

윤석열은 간호사들이 바랐던 간호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했다. 심지어 간호법은 윤석열 자신의 공약이었는데도 말이다.

모멸감

정부는 노동시간 연장 시도 등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는 노동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인력이 부족해 불규칙한 3교대 근무를 하며 연장수당 청구도 못 하고 있는데 말이다.

병원 사용자들도 정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은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다 번아웃과 사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코로나 영웅’이라고 추켜세웠을 뿐, 그에 합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도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 병원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중단했다. 이 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 위협에 직면해 있다.

가파른 물가 인상으로 임금 인상 요구도 상당하다.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 4만 8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임

금 인상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병원 노동자들의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은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

노동자들은 “정부에 씻을 수 없는 배신감마저 든다”며 불만이 엄청나다. 6월 27일 동시 쟁의조정 신청에 참가한 지부와 조합원 수가 역대 최대다. 6월 8일 산별파업 결의대회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5000여 명이 모일 만큼 열기가 상당하다.

보건의료노조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성과를 얻길 응원한다.

전 세계 병원 노동자들도 같은 요구를 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부와 사용자들은 병원 노동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해 왔다.

이에 맞서 여러 나라 병원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 투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됐다. 특히 지난해 국제적인 물가 급등과 생계비 위기 상황이 노동자들의 저항을 촉발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

영국과 호주, 독일에서는 실제 파업이 벌어졌고 미국 뉴욕에서는 파업 예고로 성과를 얻었다. 이 노동자들의 핵심 요

구도 임금인상과 인력 확충이었다.

대법원 타워크레인 월레비 인정 판결 무시

윤석열 정부야말로 공갈·협박·갈취범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격으로 건설 노동자들의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월레비에 임금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를 등에 업은 건설 사용자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고용에서 배제하고, 공사 비용을 절감하려고 불법 하도급을 늘리고 안전 규정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공사 강행을 종용하고 있다.

윤석열이 말하는 '법과 원칙'의 실상이다.

특히,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정부의 집중 공격을 받아 왔다. 정부 조치로 월레비 지급이 올해 2월에 전면 중단돼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임금이 사실상 반토막 났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사측의 위험한 작업 지시를 거부하거나 기상 악화 등 안전 문제로 작업을 중지하는 노동자들에게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고



반윤석열 투쟁의 견인차 구실을 해 온 건설 노동자들. 계속된 공격에도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있다. 노동자의 밥줄을 끊겠다는 협박이다.

건설 사용자들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있다. 그 결과 토목건축 노동자들은 하루 2~3만 원의 임금 인상분과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휴가, 공휴일 유급수당, 토요일 연장근무 수당, 휴일할증수

당 등 그동안 투쟁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약속받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월 100만 원 이상 임금이 삭감된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누려 오지 못한 건설 노동자들이 그나마 투쟁으로 얻은 것들을 무력화시키

고 있는 것이다. 건설 노동자들이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는데 이유다.

이에 건설노조는 7월 14일 전국 곳곳에서 파업을 벌이고 집회를 연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힘을 얻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 조정이 끝나는 7월 10일 이후 쟁의권을 얻게 된다.

플랜트건설(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기간산업 설비의 건설·유지·보수를 담당)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내걸고 7월 13일 파업을 한다.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을 배경으로 플랜트건설 사용자들도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건설노조 파업과 플랜트건설 파업은 윤석열 퇴진 요구와 산별 현안들을 결합시킨 민주노총의 2주간 릴레이 파업의 일부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을 내걸고 이런 파업에 나서게 하는 데서 건설 노동자들은 핵심적 구실을 했다. 반윤석열 투쟁의 견인차 구실을 해 온 건설 노동자들이 빼앗긴 성과를 되찾기 위한 저항에서 승리해야 한다.

김승섭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정액 인상 투쟁에 나선 공무원 노동자들

최근 3년간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임금인상률은 2021년 0.9퍼센트, 2022년 1.4퍼센트, 2023년 1.7퍼센트에 불과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퍼센트였고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도 줄지어 인상됐다. 요즘 점심값도 1만 원대인데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는 한 끼에 6360원뿐이다.

턱없이 부족한 임금 인상으로 2022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83.1퍼센트 수준까지 떨어졌다.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뿐 아니라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토막이 났다.

올해 4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34조 원 감소했는데, 그중 15조 8000억 원이 법인세 감소분이라고 한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과 부자 감세를 실시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은 억제하려 한다

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은 억제하면서 기업주들의 배를 불린 것이다.

이제 공무원들은 청년들의 선호 직업이 더는 아니다

통제 불능이 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개시된 지 한 달이 됐다. 7월 3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서방(과 한국) 언론들도 우크라이나군이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속도는 느리고, 진격도 제한적이다.

6월 29일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자포리자 지역에서 1300미터, 도네츠크 지역에서 1200미터 진격했다(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한나 말라르의 발표).

우크라이나군은 일부 점령지를 탈환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구축한 두터운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점령지의 전략적 요충지를 요새화하고 포병과 보병을 배치해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반격할 때 사용했던 작전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월한 공군력이 더해져 서방의 프로파간다와는 달리 우크라이나군의 진전은 더디다.

사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선의 현실은 제2차세계대전보다는 제1차세계대전의 참호들에서 벌어진 ‘고기 분쇄기’* 전투와 더 닮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겨우 몇백 제곱미터의 땅을 점령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죽어가고 있다.

미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는 6월 15일 나토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주 어려운 전투다. 또, 매우 격렬한 전투이며, 상당 시간이 걸리고, 많은 대가가 따를 것이다.”

미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도 같은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기적 지원과 장기적 지원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둘은 우크라이나 “대반격” 상황을 가장 소상하게 알고 있을 인물들이다.

용어 설명

고기 분쇄기 전투

1916년 2월 독일군은 프랑스의 전략적 요충지 베르됭에 프랑스군의 전력을 집중시켜 한꺼번에 분쇄하겠다는 ‘고기 분쇄기’ 작전을 폈다. 이를 좌절시키려고 프랑스군도 베르됭에 막대한 화력과 병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했다. 이 전투로 10개월 동안 희생된 양군 사상자는 70만 명에 달했다.



어느 쪽도 결정적 고지를 점하지 못한 채 계속되는 전투

두 사람의 말인즉슨 이렇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요새를 돌파하든 그렇지 못하든, 러시아 포탄이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와 미국 브래들리 장갑차를 계속 파괴하든 말든, 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은 전쟁을 끝낼 결정적 전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 장관 블링컨은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개시될 즈음 핀란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크라이나인 같은 자유민들이 세계 도처에서 자유 국가들 — 자신들의 운명과 자유를 인식하는 국가들 — 의 지원을 받으면, 그들의 권리와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그들이 가진 힘은 엄청날 뿐 아니라 막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인들이 계속 죽어 나갈지라도 미국의 장갑차, 독일의 전차, 영국의 미사일, 한국의 포탄 등을 우크라이나에 계속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미국 탐사 보도 저널리스트인 시모어 허쉬는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성공하지 못하면 바이든의 2024년 대선 캠페인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썼다. 그래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 외교 정책의 성공 사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동기가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자국의 취약성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7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하나는 단연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다. 윤석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 미국 등 서방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려 한다.

푸틴의 정치 위기

한편, 러시아의 입장에서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도 광주의 아파트 단지에서 30여 가구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상반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 5명이 자살했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처지에 공감하는 공분이 크게 일었다.

그러나 5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빛의 구렁텅이에 방치하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었다.

특별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것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는 이런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주고 대출을 해 줄 테니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집을 사라라는 것이었다. 또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경매를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고스란히 잃을 수 있는 상황은 방치한 채, 이들이 당장 거리에 나왔지는 않게 LH가 집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거주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각자도생

심지어 전세 사기로 전세금을 잃고도 전세자금대출은 한 푼도 탕감되지 않고 전액 갚아야 한다. 특별법에 담긴 대책은 이 빚을 20년간 분할 상환하게 해 주겠다는 것뿐이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지원을 받으려 해도 집단 전세 사기라는 점을 입증하는 까다로운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약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최병현 씨는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과정은
고통전가에 맞서
노동자 등 서민들의 삶을
지키려면
국회 합의에 의존 말고
대중 투쟁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형세 낭비라고 몰아붙이더니 종부세 삭감은 신속하게 진행했다

10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한 것으로 유명한 빌라왕 김대성 사건의 피해자이다. 경매를 하려면 집주인이 있어야 하는데, 김대성은 지난해 사망했고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 경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너무 황당하게도 법원에서는 저보고 상속인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경매 절차를 진행하려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기꾼의 재산 상속 과정을 다 파악해야 해요. 국가가 책임지고 하면 쉬워질 텐데, 피해자들이 각자 문제를 풀어야 하니 황당하죠.”

무엇보다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날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 사기로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서지에 씨는 이렇게 말했다.

“경매를 받는다 해도 지금 집값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엄청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진짜 어쩔 수 없어서 경매를 받는 거예요.”

조수진 씨는 얼마 전부터 전세금을 폐일 위기에 처했지만 집단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세를 아끼려고 무리해서 대출을 갚아 가면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날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재깍재깍 갚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갚지 않으면 제재를 가고 압류하는 등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세입자한테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지가 너무 황당해요.”

전세 사기 피해는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2022년 1월 25.9퍼센트에서 2023년 4월 52.4퍼센트로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계약 종료 시기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세입자들이 늘어날 공산이 큰 것이다.

고통전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집주인들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종부세를 깎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출 규제 완화는 이미 가게 부채가 매우 큰



노동자들, 정부의 강경 우익화에 맞서기 시작하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우익화 행보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커지고 있다.(11~13면에 실린 기사들을 보시오.)

7월 4일 윤석열은 노동자 파업을 민간 투자의 걸림돌이자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 전 주에는 종전 요구를 “반국가 세력”의 행위로 규정했다.

윤석열은 최근 차관을 13명이나 교체하면서 그중 다섯 자리를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채웠다.

거추장스러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건너뛰면서도 친위 내각 효과를 내는 인사였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우익적 숙정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은 민간 단체와의 교류가 많은 통일부·환경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이념(에) 치우쳐 온” 부처”라고 콕 집어 비판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은 친북 독립유공자를 재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항일운동기에는 북한 국가가 없었으므로 친북 독립운동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도려내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노골적인 반(反)좌파 우익 선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권 카르텔”

윤석열 정부는 경제·안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기업 이윤과 부유층 권력을 보호하려고 서방 제국주의 지원과 노동자 등 서민층 생계비 공격을 결합시켜 왔다.

최근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친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반(反)좌파 우익 선동과 부유층 정부 선언은 정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일 노선에 대한 보답으로 경제 제재를 완전 해제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당연히 자본가 계급은 이런 상황에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윤석열의 친서방 외교를 ‘국익’에 반한다(또는 ‘매국’이다)고 비판하는 것이 부정확한 이유다.

윤석열의 친기업·반노동 기조는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도 확인됐다.

‘수출’과 ‘성장’이라는 전통적 경제 정책이 새삼 강조됐다. 성장을 위해선 기업주들의 투자가 늘어야 한다. 투자 촉진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목표임을 재확인했다.

윤석열은 민간 투자를 방해하는 적으로 ‘규제’, ‘파업’, ‘국회’를 지목했다.

윤석열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부자 감세를 동시에 강조했다. 이는 긴축, 즉 부유층을 위해 노동자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을 깎고 공공지출을 줄이

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석열의 최근 우익적 언행과 정부 부처 숙정은 노골적인 부유층 정부 선언인 것이다.

좌우 양극화

이처럼 윤석열은 부자들의 단합된 지지와 우파 결집으로 현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윤석열 지지율이 30퍼센트대 중반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다.

정부·여당은 이른바 중도층을 포섭하겠다는 어설픈 타협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여권은 구조조정, 정권 재창출 문제로 당시 여권이 분열한 것이 2016년 총선 패배라는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는 교훈을 얻은 듯하다(2020년 21대 총선 패배는 불가피했다고 볼 것이고). 게다가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던 새누리당 분당파들은 정치적 자립에 실패해 국

민의힘으로 되돌아왔다. ‘윤희관’인 장제원, 권성동 등이 그 산 증인들이다.